

공공서비스 악화, 요금 인상, 인력감축을 낳는 공기업 '선진화' 에 맞선 투쟁은 정당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부자 살리기'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생긴 적자를 만회하려고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고스란히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고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로 잠시 미뤄지다가 싶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 대한 이 악랄한 공격은 "선진화"가 아니라 '후진화'다. 이는 교육·의료·가스·전기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금 인상과 일자리 감축 효과만 낼 것이다. 공기업 '선진화'의 첫 사례로 꼽힌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도 '정원의 24 퍼센트 감축과 계약직 83.6 퍼센트 해고 계획'에서 보듯 노동자 희생만 강요했다.

더구나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는 "철밥통", "신이 내린 직장"이 아니라, "고용불안의 주범"(전성인 홍익대 교수)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기업 노동자들이 외국계 기업 다음으로 가장 크게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을 정도다.(공기업 노동자 58.9 퍼센트가 고용불안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는데, 이는 중소기업 57.4 퍼센트, 대기업 56.5 퍼센트 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명박이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약속은 운데간데없이 사라진 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는 2012년까지 2만여 명에 달하는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각 공공기관들은 서둘러 감축 계획을 내놓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지난 7~8월 사이에만 2년 이상 근속자의 56.4퍼센트가 해고됐고, 고작 8.2퍼센트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임금인상 요구가 이기주의라는 비난도 퍼붓고 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기업 노동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예 '임금 삭감'을 경영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고, 철도공사는 2.5 퍼센트 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연봉제와 임금 피크제 도입은 물론이고, 성과급과 각종 수당, 복지혜택



2002년도 철도·발전·가스노조는 연대파업으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했다.

등도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미 임금 동결과 실질임금 삭감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3년 가까이 임금이 동결됐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반면, 철도공사, 주택·토지공사 등 주요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 원에 달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요구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임금 동결 결정은 민간에도 악영향을 끼쳐 임금 삭감 내지 동결이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질 것"(통합공무원노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운수연맹의 공동파업 등 총력투쟁 결의는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지금 보수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기관장들은 징계를 시작했다.

이명박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노조와 잘 지내며 편안하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장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며 노조탄압에 열을 올려 왔다.

그러나 "공기업 노조의 '대정부 투쟁'을 단속하라"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주문은 역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우려를 보여 준다. 2002년에도 철도·발전·가스노조는 연대파업으로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를 저지하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해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계속된 일자리·임금 공격과 노조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차곡차곡 쌓여왔다. 가스노조와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높은 파업 지지율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부문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노동자 단결을 확대하고 광범한 연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투쟁을 각격파하려고 사업장별

로 대응을 달리하거나 성과도 없는 교섭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한 쪽에 양보 시늉을 하며 다른 쪽을 고립시켜 분쇄한 다음, 다시 나머지 부분도 공격할 수 있다. 이럴 때 단결 투쟁의 기초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철도·발전·가스 등 공동투쟁본부의 9개 노조가 단결의 구실을 형성하고,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한데 힘을 합쳐 공기업 '선진화' 계획 자체에 맞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1월 6일 공동파업 등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한 결의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공동 연대 파업이야말로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를 좌절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반MB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진보진영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하반기 공공부문 투쟁은 비정규직·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동법 개악에 맞서는 투쟁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적 권리 공격 등에 맞서는 반이명박 정치 투쟁과 결합되어야 그 힘을 배가할 수 있다.

갈 길을 보여 주는 국제 공공부문 노동자들

세계 각지의 공공부문 투쟁과 승리 사례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

루마니아

10월 5일 루마니아에서 무려 80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IMF가 2백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루마니아 정부에 요구한 공공부문 임금 삭감에 반대해 병원 노동자, 교사, 중앙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심지어 경찰과 교도소 간수들까지 일손을 멈춘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환자들만을 받았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으며, 중앙 정부와 지자체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는 동구권이 몰락한 1989년 이후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대중 행동이다. 철도 노동자들은 아직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일자리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캐나다

지난 7월 말, 토론토 시청에 고용된 노동자 2만 4천 명이 39일 간의 파업 끝에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 승리의 주역은 토론토 시내의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보육원 등의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시청 직원들이다.

파업의 발단은 토론토 시장이 시청 노조에 들이민 개악안이었다. 시장은 직원들의 고용을 악화시키고 생계비를 동결하며, 장기근속자의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기나긴 협상 끝에 파업에 나선 시청 직



임금을 삭감·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 체신공사(Royal Mail) 우체국 노동자들

원들에게 주류 언론의 십자 포화가 쏟아졌다. 특히 근속 중에 사용하지 않고 적립해 둔 병가를 퇴직시에 가장 6개월치까지 월급으로 보상받는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시청 노동자들이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했고, 시장도 '병가적립제' 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종 타결된 합의안에서 '병가적립제'는 적어도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행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 애초에 시장이 제시한 개악안의 내용은 거의 관철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심지어 법정 공휴일을 하나 추가시키는 성과까지 얻어냈

다! 우파 시의원들은 이 합의 결과를 보고 시장이 "노조에 굴복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영국

지난 몇 달 사이 영국 체신공사(Royal Mail)는 우체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노동 강도를 높이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15 차례의 전국적 하루 파업을 벌였다.

9월 29일에는 전체 우체국 노동자 10만 명 중 4만 3천 명이 하루 파업에 동참하

도 했다. 파업에 대한 사측의 악랄한 대응(파업 참가자들을 감봉 조치한 것 뿐 아니라 파업 파괴 행위에 동참하길 거부한 노동자들까지 감봉 조치하는 등)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지를 더 키웠다. 중앙의 노조 지도자들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기다리라며 파업을 자제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징계당한 동료들을 방어하기 위한 기층의 비공인 파업이 줄을 이으면서 투쟁 동력을 이어갔다. 결국 10월 8일에 치러진 찬반 투표에서는 67퍼센트 참가율에 76퍼센트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전국 총파업이 가결됐다. 영국 공공 서비스의 명운이 걸린 한판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에 돌입하려고 할 때 필수유지업무제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민주당이 현재 '공공기관선진화반대공동선언'에 동참했지만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의존하거나 민주당을 계속 신뢰해서는 안 된다.

필수유지업무는 그 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를 포괄한다. 예컨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쟁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운행 수준을 1백 퍼센트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필수유지업무제는 개별 노동자들에

게 손해배상을 가하는 악랄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 인원의 50 퍼센트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달 8일 철도노조의 하루파업 때 철도 공사가 어찌나 대체근로를 많이 투입했는지 평상시 인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곳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필수유지업무제를 다 지키며 파업에 나선다면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과 그렇지 못한 조합원들 사이에 단결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파업의 효과가 심하게 약화돼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동참하고 단결해서 집단적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고 투쟁 대오가 단단해서 사기가 높고 지지가 확 대 된다면, 악법을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필수유지업무제를 정면으로 거슬러 투쟁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과거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각종 악법을 지속적인 투쟁으로 무력화한 경험이 있다. 철도·병원·항공 등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직권중재제도를 투쟁으로 넘어서기도 했고, 민주노총이 제3자 개입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에 맞서, 교사와 공무원들이 단결권 제약에 맞서 싸워온 전통이 있지 않은가.

단호한 파업과 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된다면 필수유지업무제에 도전할 자신감도 높아질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파업권을 박탈하는 필수유지업무에 맞서 싸우는 것, 공공부문을 시장화·민영화해 기업들의 탐욕에 내맡기려는 미친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진정한 '필수유지업무'다.